



CHUNGNAM NEWS

충남 소식

2018 SPRING Vol.82

1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더 안전해 진다



충남도가 2018년 2월 5일부터 중앙부처, 공공단체, 민간 전문가와 함께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고 10개 실·국 22개 과가 참여하는 안전관리추진단을 구성, 시·군과 합동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세월호 사고 이후 사회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대상은 건축 시설, 생활·여가시설, 보건복지·식품시설 등 6개 분야 도내 1만 3000여 개 시설이다. 특히 올해 도는 최근 사고발생 분야와 안전 취약시설 등을 위험시설로 분류해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분야별로 민간전문가를 필수적으로 참여시키며 안전점검 실명제를 통해 점검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도내 위험시설은 요양병원 등 159곳, 산후조리원, 대형 목욕업소 82곳, 찜질방, 숙박시설 등 770곳, 레저스포츠타 시설 358곳, 대형공사장 등 87곳, 전통시장 45곳, 산사태 위험지역 등 1283곳이다.

우선 2월에는 동절기, 설 명절 등을 감안하여 화재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점검하였고 3월에는 공사장, 산사태 취약지역, 교량 등을 위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기에 점검대상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뿐만 아니라 안전규정 준수 여부, 유지관리체계 등을 중점 점검하고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할 방침이다.

또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에 도민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안전신문고를 통해 취약시설 및 위험시설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 도는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법령상 점검결과 합격필증을 부착하거나 위험성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분야는 적극 공개하고,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력을 관리해 나아갈 방침이다.

김영범 도 재난안전실장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불합리한 법·제도와 안전무시 관행을 적극 개선할 것”며 “추진과정에서 발굴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적극 활용해 정밀점검 및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3월 30일까지 54일간 계속된다.

2 도민 먹거리 안전 힘 모은다

시·군 위생과장 회의 개최… 식품·공중위생 중점 과제 등 논의



충남도는 올해 식품·공중위생 중점 과제를 논의했다.

고일환 도 복지보건국장을 비롯한 도 관계자, 시·군 위생과장 및 위생팀장 등 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연 회의는 올해 도와 시·군 주요 업무 추진계획 공유, 현안 사항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도는 올해 식품·공중위생 안전 분야 중점 과제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대시행 △맛 집 홍보물 제작 △요리경영대회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식중독 사전예방 관리 △식품안전 진단 컨설팅 △식약처·교육청 등 유관기관 연계한 식품위생업소 기획·합동·특별점검 △위생용품관리법 시행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소 전수조사 및 지도 점검 등을 실시한다.

특히 지난해 도와 시·군의 사전 예방 노력에 힘입어 17건(124명)의 식중독이 발생, 2016년(32건 288명)에 비해 56.9% 감소한 성과를 밝히며, 올해도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등 지속적인 식품 안전 관리를 통해 도내에서 단 한 건의 식중독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도는 이와 함께 모범음식점을 대체하는 새로운 인증제인 음식점위생등급제 참여 업소를 시행 첫 해인 지난해 49개 업소에서 올해 3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시·군 우수사례로는 △지역 특산물 활용 밤 음식 개발 및 보급(공주시) △음식점 외부가격 표시제 확대 운영(보령시) △건강진단 결과서 갱신 사전 예고제 운영(서산시) △

맛 찾아 떠나는 서천 나들이 여행길 코스 개발(서천군) △예산 맛 집 찾기 및 홍보(예산군) 등이 발표됐다.

고일환 도 복지보건국장은 “도는 올해 도민의 먹거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먹거리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밀양과 제천 화재 참사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식품·공중위생 분야 시설에 대한 안전 진단을 철저히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CNI NEWS

연구원 소식

2018 SPRING Vol.82

1 충남 김 산업, 생산부터 수출까지 인프라 강화



충남 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생산, 가공, 유통, 수출로 이어지는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충남연구원 김중화 책임연구원은 충남리포트 294호에서 “김은 도내 수산물 중 약 32%를 차지하는 핵심 주력 품목”이라며 “충남의 김 생산 어가 당 소득도 2016년 기준 3억 원대에 진입했고, 김 가공업체는 전국대비 약 50% 수준인 약 360개소로 매우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천은 전국 최고 품질의 원초김 주산지이며, 홍성(광천)은 조미김 업체가 집적되어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보령(대천)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전국적인 인지도의 대규모 조미김 업체가 입지해 있다.

이렇듯 충남은 31건의 어업권과 2400ha의 어장 면적 등 전국 2위 규모의 김 양식을 하고 있지만, 1위인 전남과 비교하면 무려 약 22배 차이가 나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충남의 원초김 생산량은 4만 톤으로 전남 31만 톤에 이어 전국 2위 수준이지만, 역시 격차는 약 8배 차이가 난다. 이에 김 연구원은 원초김, 마른김, 조미김, 김 수출 등의 공급사슬 관점(SCM)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김중화 연구원은 “지역에 맞는 품종 개발, 원초김 양식장의 확대 등 고품질 원초김 생산을 위한 R&D 투자는 물론,

마른김 특화지구를 조성하는 등 경쟁력 있는 마른김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조미김 중심에서 탈피해 다양한 조미제품 개발에 투자해야 하고, 수출 공동 브랜드 개발 등을 통해 김 수출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 충남도가 ‘수산업의 인프라 확대’를 위해 총 47개 사업에 212억을 투자하기로 했다”며 “충남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과제를 발굴·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 충남연구원, ‘충남도내 소, 돼지, 닭 축사지도’ 제작 “축종별 사육 두수·면적·밀도 등 공간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충남의 소, 돼지, 닭 축사별 위치정보에 기반한 ‘축사지도’가 나왔다.

충남연구원은 도내 축사(소, 돼지, 닭)의 위치자료를 바탕으로 축종별 사육두수, 축사면적, 축사별 사육밀도를 분석한 정책지도 21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충남연구원 최돈정·강마야·김기홍 박사 등 연구진은 “이번 정책지도는 충남도 농정국의 협조로 지난 해 기준 13,688개의 축사정보를 공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은 12,167개 축사에서 313,563마리의 소를 키우고 있는데, 그 면적은 모두 6,812,960㎡로 축사 당 평균 28마리를 키우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소 축사가 가장 많은 시군은 홍성군(1,981개)이며 소를 가장 많이 키우는 시군 역시 홍성군(47,473마리)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 축사면적은 예산군과 홍성군이 각각 약 820,000㎡로 가장 넓었다. 또한 축사가 가장 많은 상위 3개 읍면동은 홍성군 홍동면(301개), 부여군 은산면(297개), 공주시 우성면(276개) 등이었다.

다음으로 도내 돼지축사는 모두 1,410개이며 총 2,642,338㎡ 면적에서 2,166,069마리를 사육해 축사 당

평균 1,536마리를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돼지 축사와 사육 두수를 보유한 시군은 홍성군(410개 축사에서 515,109마리 사육)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돼지 축사 면적도 홍성군(674,633㎡)이 가장 넓었고, 읍면동 중에서는 보령시 천북면이 228,281㎡로 가장 넓었다.

마지막으로 도내 닭 축사는 총 1,052개이며 총 2,394,598㎡ 면적에서 44,244,972마리를 사육해 축사 당 평균 42,058 마리를 키우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가장 많은 닭 축사와 사육 두수를 보유한 시군은 천안시(131개 축사에서 6,996,213마리 사육)로 나타났다. 반면 닭 축사 면적이 가장 넓은 시군은 부여군(304,194㎡)이고, 읍면동 중에서는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이 71,088㎡로 가장 넓은 닭 축사면적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번 연구 책임자인 충남연구원 최돈정 박사는 “이 축사지도는 도내 축산과 환경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로 의미가 크다”며 “2016년부터 구축해 온 가축질병, 구제역 매몰지, 조류독감 자료 등과 융·복합한다면 향후 축산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입체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CNI NEWS

연구원 소식

2018 SPRING Vol.82

- 3
- 충남연구원, “충남 자동차 대체부품시장 선점해야”

 - 대체부품 인증·시험센터 유치 관건
 - 소비자 인식 제대로 알리고 관련 산업기반 구축 필요



충남도는 자동차 부품시장의 새로운 변화 중 하나인 대체부품산업 기반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충남연구원 김양중 연구위원은 충남리포트 296호에서 “자동차 대체부품시장이 활성화되면 자동차부품기업의 완성차 업체 의존도가 크게 줄어들고, 자기 브랜드를 통한 시장 판매와 수출이 확대되며, 소비자의 차 수리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이 열렸지만 아직 국내기업들의 시장 진출과 투자는 미흡한 상태”라고 말했다.

‘자동차 대체부품’이란 완성차에 처음 장착된 부품(순정품)과 비교하여 성능과 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순정품을 대체할 수 있는 부품을 말한다. 김양중 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 대체부품 인증제도는 국내 완성차업체의 디자인권에 묶여 수입차 부품에만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소 자동차부품기업이 국산차의 대체부품을 생산·판매하고자 할 경우 자체 생산·유통이 불가능하다”며 관련 규제 완화를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에 충남지역 소비자 150명과 차수리 서비스업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모른다(전혀 모른다 포함)고 응답한 비중은 46.6%로 나왔다. 또한 대체부품에 대해 재생

이미지 42.9%, 중고이미지 28.6%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크게 나타났다.

김양중 연구원은 “충남 자동차 대체부품시장의 저변확대, 중소 자동차부품기업 지원과 산업기반 마련을 위해 올바른 홍보를 통한 자동차 대체부품 인식개선과 제품정보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체부품생산기업을 위한 수출 거래선을 발굴하고, 도내 대체부품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기업 유치 및 투자유도, 자동차 수리 우수 인력 양성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은 올해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시험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정부예산 5억 원을 확보한 상태로, 이는 향후 내포신도시 첨단산업단지 내 총 사업비 364억 원을 투자하는 국가공인 인증기관인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시험센터 유치의 초석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충남의 사계 — 봄

봄

추운 겨울 지나고

봄눈이 내려앉았다

창문 활짝 열고 나와봐요

오늘부터 꽃길만 걷게 해줄게!

〈글 정봉희, 사진제공 : 천리포수목원〉

